

특집

2005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김현승 시인은 그의 시 *理想*에서 “오르는 산은 / 오르지 않는 산보다 더 높다.”고 했다. 매년 한 해를 보내면서 늘 올 한 해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때이고 돌아보면 그저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리라. 즐거웠던 일도, 때로 희망에 가득찬 일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쏟아지는 빗방울보다 더 진한 울음을 울어야 했던 때도 있었으리라. 그런 모든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소중한 기억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김 시인이 노래했듯이 “오르지 않는 산은 / 오르는 산보다도 가파롭지 않은 것, / 그러나 물 없는 저 산에 / 노를 저어 오르는 이만이, / 더 높은 눈으로 더 높은 산을 / 산 위에 바라볼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다음 해를 기약할 일이다. 올 한 해 부지런히 산을 올랐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산을 오르리라 다짐하면서 열심히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2005년 우리 도서관계의 10대 뉴스를 정리한다.

10대 뉴스는 2005년 11월 말 도서관메일링리스트 공지를 통해 후보뉴스를 추천받은 결과 6명의 도서관인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 그 의견을 기초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이 최종적으로 18개의 후보뉴스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별도의 인터넷 설문사이트를 이용해서 도서관인의 추천을 받았다. 그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한국도서관협회 내부토론을 거쳐 ‘2005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확정하였다.

2005년을 정리하면서 희망적인 일은 늘 새로운 위기와 내적 진통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다. 도서관인들이 가장 많이 추천해 준 2006년 사서교사 154명 채용 확정이나 도서관법 개정 추진, 주40시간 근무제로 불거진 공공도서관 휴관 문제, 저작권법 문제 등에서 우리 도서관계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 도전의식과 강력한 내적 합의화 연대를 바탕으로 한 실천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한 편 한국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60년 연륜을 바탕으로 2006년 세계 도서관계에 우리의 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서관 현장에서 혁신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온 도서관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2005년 한 해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글: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정]

2005년 한국 도서관계 10대 뉴스 (무순)

- *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 * WLIC 2006 Seoul 준비 본격 추진 : 조직위원회 출범, 북한 도서관계 인사와의 만남, 그리고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의 IFLA 이사 피선 등
- * 국가인권위원회,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 * 문헌정보학계,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촉구 성명서 발표
- *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노력 지속 :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등
- * 2006년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사서교사 154명 채용 확정
- *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사태 일어나
- *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휴관 문제 불거져
- * 독서문화 확산에 도서관들도 적극 참여하는 한 편 독서관련 입법도 추진
- * 구글 등 국제적인 인터넷 포털 업체의 도서관 장서 디지털화 사업 국내에서도 관심 끌어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2002년 문화관광부가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이후 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이후 문화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도서관법 전면개정을 준비하던 중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이미경 위원장이 도서관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2004년부터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그 후 2005년 4월 15일 드디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재검토한 이후 6월 1일 정식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미경 의원등 47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일부에서 개정법률안의 국가대표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9월 1일에는 박형준 의원등이 또다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치열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9월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재현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도서관계 자체적인 입장조율 노력도 있었으나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처럼 법률안 처리가 예상 밖의 어려움에 처함으로써 2002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중

요한 도서관 관련 정책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는 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WLIC 2006 Seoul 준비 본격 추진 : 조직위원회 출범, 북한 도서관계 인사와의 만남,

그리고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의 IFLA 이사 피선 등

올 한 해는 2006년 8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2006 Seoul) 준비에 전력을 다한 해였다. 우선 이 대회를 주관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신기남)'가 2005년 1월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11월 25일에는 약 100명의 사회 각계 인사와 도서관계 인사를 망라한 조직위원회 총회가 열려 2006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오늘로대회에서 내년 대회를 적극 홍보하였고, 미국, 중국, 일본 등에는 홍보단을 파견, 전세계 도서관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내년 대회 때 참가자들이 방문할 방문도서관 37개관이 선정되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우리나라 도서관인들에게도 내년 대회를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활동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과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 등 우리나라 도서관계 인사들이 11월 30일 평양을 방문, 북한 도서관계인사들과 만나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북한 도서관계 인사들의 참가 문제를 협의하여, 원칙적으로 참가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번 북한 방문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도서관협회장인 인민대학습당 총장 등과도 만나 문화교류 문제도 논의함으로써 향후 남북 도서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내년 WLIC를 계기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한상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겸 한국도서관협회장이 국내 도서관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IFLA 이사로 선출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각 분과에서도 7명의 사서가 추가로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1개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설치해서 시민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등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권 조사결과 사생활 비밀침해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4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장과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상당수 공공도서관이 무인좌석발급기를 이용해 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 안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촬영한 자료를 별도 규정 없이 관리·활용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지털도서관 PC를 이용하는 시민이용 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임의적으로 과도한 방식으로 시민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관·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인권위는 CCTV 설치 도서관 사용 중단 또는 불필요한 CCTV 장비 회수 등을 권고했다.

문헌정보학계,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촉구 성명서 발표

도서관 관련 6개 학회(서지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와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말 단행된 비전문직 국회도서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월 말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는 동 학회와 협의회가 지난 해 6월, 새로 임명할 국회도서관장에 전문직 인사를 임명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제출하고 다각도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권의 나누어 갖기 식 인사로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조속히 전문직 관장 임용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11월 19일 한겨레신문이 다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장의 전문가 임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노력 지속 ·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등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중 서울대학교도서관장, 이하 '공대위') 개정을 앞두고 있는 저작권법(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3월 3일(목)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하였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범위를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도서관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구축하여 이용자와 저작권 단체간에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 대학에서 생산되고 있는 학위논문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한 대학 내에서의 이용은 자유롭게 하여야 하며 보상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과 함께, 공대위 측은 3월 8일 발표된 개정

안에 도서관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1월 8일 국회에 제출할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는 12월 6일 제출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6.13.)과 일부개정법률안 3건(정성호 의원/9.4., 우상호 의원/10.31., 박찬숙 의원/11.9.)에 대한 대안이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대안에서도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률에서 특별한 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교과서보상금 제도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등에서의 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10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안 제31조제6항)하고 있다. 「저작권법」개정에 대해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네티즌 등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를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월 5일 천영세 의원등 9명이 또 새로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서는 '도서관을 통한 저작물 등의 원격 열람과 도서관 사이의 관외 전송을 일부 허용(안 제28조제1항 내지 제5항)'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률안 처리에 기대를 가지게 한다.

2006년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사서교사 154명 채용 확정

11월 4일 전국 16개 교육청이 2006년도 신규 교원임용시험 요강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14개 교육청에서 모두 사서교사 154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8명, 부산 21명, 대구 5명, 인천 16명, 광주 14명, 대전 13명, 경기 19명, 강원 2명, 충북 9명, 충남 1명, 전북 10명, 전남 11명, 경남 11명, 제주 4명이며, 경북, 울산은 2006년 신규 사서교사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9월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내년 신규 교원임용 정원에서 당초 교육부가 요청한 400여명의 정원을 전원 삭감한다는 발표 이후 도서관계는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여 9월 30일 우중에도 불구하고 6~700여명의 사서교사, 문현정보학과 교수와 학생 등이 참여한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등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월 1일 전국학교도서관대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밝힌 214명 신규 채용 약속보다는 그 수가 적어 사서교사 정원 확보가 여전히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채용시험은 12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2004년 7월 발의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제12조 전문인력 배치' 조항에 대한 공대위와 전국여성노동조합(사서지부)와의 이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26일 양측이 대화를 가졌다. 2004년 법안 발의 이후 계속해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원칙과 방법에 대해 보여왔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비정규직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이 사서교사 자격 취득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특별과정 포함)를 조건으로 사서교사 배치 원칙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입장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올 해에도 이 법률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또 다시 법적 문제 해결은 2006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사태 일어나

2003년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로 축발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05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3월 24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주최한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위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005년 3월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3월 19일에는 기존의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가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으로 조직을 새롭게 하였다. 이 단체는 7월 15일~16일 올림픽공원에서 '전국어린이도서관한마당'을 열고 어린이도서관 발전을 도모하였다. 16일 행사에는 영부인도 참석하여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잇달아 개관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개선 사업도 추진되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도 역삼동 분관(전 학위논문관)을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했다. 이 도서관은 2006년 5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으로 다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올 해 6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별관을 소유주인 경찰청에서 소속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만들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즉각 반대의사를 밝히고 어린이도서관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면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결국 연말에 들어와 경찰청과 서울시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어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계속해서 어린이를 위한 도서

관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 ■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휴관 문제 불거져 ■ ■

200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도서관 휴관 일 확대나 변경이 이용자들에 의해 무산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고양시의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당초 월요일에서 주말로 변경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다시 종전과 같이 월요일 교차 휴관제로 돌아섰다. 인천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도 일제 휴관 방식에서 교차 휴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하남시립도서관도 시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주40시간 근무제도의 본격 실시에 따라 도서관계는 주 2회의 휴일 중 하루(일요일)에는 도서관을 휴관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도서관들도 부족한 전담인력이나 예산 등의 이유로 휴관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휴일에 휴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 독서문화 확산에 도서관들도 적극 참여하는 한 편 독서관련 입법도 추진 ■ ■

2005년 들어와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도서관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2003년 책읽는 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중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북 스타트' 운동에 그동안은 도서관의 참여가 적었으나, 2005년 들어와 광주일곡도서관, 경남 밀양의 하남도서관, 전남 여수시립현암도서관, 그리고 울산시의 도서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가 제천, 진해, 울산북구 기격의 도서관도 참여하는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 읽기에 도서관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역시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서산시와 서산시립도서관과 함께 시작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도 도서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5년 책 읽는 서울의 일환으로 16개 도서관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책 읽기 확산과 정착에 나섰다. 부산시에서도 문헌정보학과 교수진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하여 "원 북 원 부산" 운동 추

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 북 원 부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와 안양시 등에서 학교도서관 책 축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기도 했으며, 순천 가적의 도서관도 11월에 순천 어린이 책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책 읽기 확산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청소년독서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우수 운영사례 공모와 시상, 독서회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독서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12월 13일 ‘독서진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도서관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독서진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독서진흥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다. 우선 독서관련 입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함께 박형준 의원등 14인이 10월 26일 「독서문화진흥법안」을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11월 25일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었다. 또한 11월 24일 국회 정성호 의원등 10인은 「청소년독서진흥법안」을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2월 2일 청소년 위원회와 함께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10월 13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숙 의원 등 15인이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입법부의 관심 커진 상황에서 독서전문가나 시민 단체들은 이를 독서진흥 관련 법안이 자칫 독서활동의 자유로움과 개인적 성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별도의 독서진흥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도서관들의 독서진흥 활동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구글 등 국제적인 인터넷 포털 업체의 도서관 장서 디지털화 사업 국내에서도 관심 끌어 ■

세계적인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Google)이 2004년 말 세계 유명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 하는 「Google Print For Libraries」 프로젝트를 밝힌 것이 2005년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스텐포드, 미시간, 하버드 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 총 1,500만권을 스캔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대상 자료는 저작권이 없는 1923년 이전 출판물과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와의 저작권 협의가 끝난 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출판업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등 출판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 측은 지난 8월 11일 도서관장서 디지털화 사업을 11월까지 잠시 중단하였다. 대학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y

Presses, AAUP)도 구글 측에 서한을 보내 구글이 출판사들과의 계약 당시 도서관 장서 디지털 사업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이후 구글 측의 설명은 출판사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이번 프로젝트가 엄청난 저작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야후나 MS 등과 우리나라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도 도서관을 사업파트너로 삼고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도서관 관련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보아 제대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10대 뉴스보다 더 10대 뉴스 같은 일들 ***

2005년 도서관계가 지나온 수많은 시간 속에서 위에서 정리한 10개의 소식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일들도 기록에 남겨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세상은 온통 큰 일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작은 일들도 세상의 버팀돌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60주년 맞아 :『한국도서관협회 60년사』 발간

한국도서관협회가 2005년 8월 30일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945년 8월 30일 조선도서관협회로 출범한 협회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계 연대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협회는 10월 19일 제43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 자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갖고 2년여를 준비해 온 『韓國圖書館協會 60年史』를 상제하고 지난 60년동안 협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분들 가운데서 고 이재욱 제2대 회장, 고 강주진 제10대 회장, 최근만 제4대 사무국장, 김경일 제6대 사무국장, 그리고 종로도서관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여름에 공모한 기념 수필 공모전에서 수상한 6명의 회원에게도 시상을 했다.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0주년 맞아 : '국립중앙도서관 2010'도 발표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15일(월)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63년 「도서관법」 공포에 따라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2001년 「도서관진흥법」 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온 국립중앙도서관

이 10월 15일로 개관 60주년을 맞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 60주년을 맞아 10월 14일 기념식을 갖고 개관 60년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세계적 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을 발표하였다. 이 비전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힘이 강한 나라인 '지식강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비전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의 고유한 존재가치와 위상, 사회적·역사적 책무와 현주소, 그리고 급변하는 국내외 도서관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계획과 전략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 지식정보의 유통관리 및 제공 서비스 센터, 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 국내외 도서관 교류·협력 창구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담아냈다. 개관 기념 전시회와 "도서관 주제 사서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가졌고, 18일에는 "21세기 목록과 국가서지 정보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2월 16일 국립디지털도서관 기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2006년 5월 국립어린이도서관 개관과 2008년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을 통해 명실상부 지식강국을 선도하는 핵심 도서관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 또 다시 사회적 논란에 싸여

2005년 말에 또다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경기도 안산시가 11월 초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가칭)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다시 한번 민간위탁 문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안산시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등의 이유로 중앙도서관의 조직을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경비를 줄이겠다는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산공무원노조는 11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간위탁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사안으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오히려 도서관 정책의 커다란 공백과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전면적인 재검討 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시민들까지 참여한 '도서관 민간위탁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11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공공성이 훼손되고 주먹구구식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앙도서관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시내부와 시민들의 반대가 커지자 안산시는 11월 24일 공식적으로 중앙도서관 민간위탁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신 기존의 성포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겠다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번 안산시의 사례는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되어 온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 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다른 지역의 민간위탁 운영 상황 파악과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

■ 로라 부시 미국 대통령 부인,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방문

전직 사서인 미국의 로라 부시 대통령 부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차에 11월 18일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아침 일찍 도서관을 방문해서 미군부대원 자녀들과 가덕도 소양원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하하하, 히히히, 케케케”라는 웃음소리를 직접 내 가며 놀았다고 한다. 일부언론은 APEC 현장에서, 로라의 ‘책 읽어주기’를 보면서 외교현장에서의 배우자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 서울시내 대학, ‘대학도서관 자치위원회 연합회’ 결성 및 발대식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내 대학 11곳이 참여한 “대학 도서관 자치위원회 연합회”가 11월 3일(목)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문화학습 지원실인 ‘도마루’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 위원회는 보다 나은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와 학생과의 협의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 연합회는 도서관 열람실 내 CCTV 설치와 노트북 사용, 무인 좌석 발급기의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등 각 대학 도서관들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연합회의 차원에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각 대학 도서관의 장점 교류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례들을 교환하는 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직이 향후 대학도서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